

시의회 의장 후보에 신수정... 후반기 판도 변화 '촉각'

민주 경선서 결선끝 선출 '이번' 지역정가 "광주 정치지형 반전" "첫 여성 의장, 변화 열망도 작용" 집행부와 관계설정 등 관심 집중



신수정 서용규 채은지

광주시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경선에서 신수정 의원이 결선 끝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까닭에 신 의원의 후반기 의장 당선은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유력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신 의원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집행부간 관계 설정 등 시의회 판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당은 지난달 29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비공개 경선 투표를 했다. 의장

선거는 1차 투표에 이어 결선 투표에서 재선인 신 의원이 초선의 강수훈 의원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견 발표와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출마자는 재선 박미정(동구2)·신수정(북구3)·심철의(서구4), 초선 강수훈(서구1)·박수기(광산5) 의원 등 5명이다.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신 의원의 의장 후보 선출에 대해 상당히 놀라워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정모씨는 "그간 '재선 대 초선', '광주시장 대리전' 등 선거 주요 구도에서 신 의원의 입지는 없었다. 여기에 강 후보는 집행부·송갑석 전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 당선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라며 "다만 정치 경험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던 것 같다. 여기에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던 의원들까지 표를 주다 보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1호 여성 의장' 등 변화·혁신에 대한 갈망도 컸다"고 평했다.

실제 강 의원은 경선 1차 투표 당시 신 의원보다 많은 표를 획득했지만, 1대1 결선에서 신 의원에 표가 밀려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과거 강기정 시장·조오섭 전 의원 계

보로 분류됐던 신 의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서막한 관계로 변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강 시장을 비롯해 초선 의원 중 특정 학교(전남대) 사람이 많지 않다. '이들을 필두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조 전 의원쪽에서 열심히 일했던 신 의원이 9대 의회에 입성할 쯤 이미 지역 내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알고 있다. 녹록지 않은 정치 지형에서 반전을 만들어 낸 것에 모두 놀라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1부의장은 홍기월(동구1)·서용규(비례) 의원이 맞붙어 서 의원이, 2부의장은 채은지(비례)·서임석(남구1) 의원이 경선해 채 의원이 승리했다.

상임위원장에는 △의회 운영위원장 정다은 의원(북구2)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북구1)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의원(광산구1) △산업건설위원장

박필순 의원(광산구3) △교육문화위원장 명진 의원(서구2)이 선출됐다.

의장단 후보들은 1일부터 3일까지 시의회 본선 후보자 등록을 거쳐 오는 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선을 치른다.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는 당일에는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이 시작, 사흘 뒤인 11일 선거를 진행한다.

시의회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21명·국민의힘 1명·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 정당 분포로 볼 때, 민주당 경선에서 확정된 의장단·상임위원장이 그대로 후반기 위원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당 독점'을 막기 위해 도전 의지를 내비쳤던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은 최근 본선 도전을 포기했다. 본선에서 신수정 의원이 당선되면 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추미에 "광주는 민주당 펌핑해주는 심장"

광주서 토크쇼 참여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주를 찾아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시대를 논하다' 토크쇼에 참여해 "광주는 민주당을 늘 펌핑해주는 심장"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광주가 펌핑한 피가 뇌로 도달하지 않은 이유는 심장(광주) 탓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때로는 계산적이고, 표에 따라 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래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며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1년 검찰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 민주당조차 생각지도 못했다"며 "윤 정권 이후 모든



것이 임계점을 넘어 회복·탄력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가 '위험의 외주화'에 놓여있다"며 "방안에서 에어컨을 튼

자신만 시원하고 외부 사람들은 이로 인해 뜨거움을 느끼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사회·경제가 모두 이러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직면한 위기는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저출생·지역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려면 책임있게 문제를 떠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진행한 박구용 전남대학교 교수도 시대 문제를 두고 "고통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생산하지 않은 약자에게 넘기고, 외주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성현 기자



고위당정협의회 참석 황우여(아래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 "윤,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를 두고 "윤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도되고 조작된 건 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식 구조 아니냐"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고, 대통령의 상식을 국민에게 입증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

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며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줌 그만 보시라'며 울먹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특조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라"며 "그것만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 의사 결정 구조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도걸 "최악 세수 결손, 확보 대책 서둘러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30일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금년도 세수 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 결손은 18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전년 국세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 원 정도 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5월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며 "조기경보를 올려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특검·탄핵 놓고 전면전 양상... 본회의 긴장 고조

野, 방송4법·김홍일 탄핵안 상정 與 "방송영구 장악용" 강력 반발

6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 끝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6월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모두 2일이나 3일 본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4일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 있어서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을 중재한다.

앞서 여야는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권주자들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하면, 당론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야권이 내놓은 특검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정국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쟁용이라는 주장이다.

방송4법(방송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방송

영구 장악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는 김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사실상 의결 기능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야5당의 김 위원장 탄핵안 제출에 맞서 지난달 28일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탄핵 정국에 대비해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 최근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탄핵안은 지난달 27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부쳐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등 야7당이 지난달 29일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열린 '해방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가졌다.

서울=김선욱 기자